

『충남의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2021. 12.

※ 참고사항

본 연구모임은 충남도의회 이선영 의원이 충남연구원에 의뢰한 “충남 이주민의 안전한 체류를 위한 지원정책 제안” 연구과제의 보고회와 겸해서 진행되었음. 본 결과보고서에는 위 과제에 대한 보고 및 논의 내용은 생략하고 불평등과 양극화 관련한 발표 및 토론 내용만 수록함

제1장 연구모임 등록 1

- 1. 의원연구모임 등록신청서 2
- 2. 의원연구모임 연구활동계획서 3
- 3. 연구모임 사업계획(안) 4

제2장 연구모임 활동 경과 8

- 1. 연구모임 발족 및 제1차 토론회 11
- 2. 제2차 연구모임 토론회 28
- 4. 제3차 연구모임 토론회 32
- 5. 제4차 연구모임 토론회 37

제3장 충남의 불균형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 연구 52

I . 연구모임 등록

1. 의원연구모임 등록신청서
 2. 의원연구모임 연구활동계획서
 3. 연구모임 사업계획(안)
-

① 의원연구모임 등록신청서

1. 모 임 명 : 충남의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
2. 대 표 자 : 이선영 의원
3. 연구목적 : 지역, 경제, 소득, 정보,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양극화 상황 해소방안 모색
4. 구 성 원 : 10명

구 분	성 명	소속 또는 상임위원회	서명날인	비 고
대 표	이선영	기획경제위원회		도의원
간 사	박경철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		실장
회 원	최 훈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도의원
"	김동일	복지환경위원회		도의원
"	김기서	농수산해양위원회		도의원
"	홍기후	복지환경위원회		도의원
"	윤철상	농수산해양위원회		도의원
"	안장현	기획경제위원회		도의원
"	김용현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		박사
"	백운성	충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박사

※ 불 임 : 회칙 또는 정관 (있는 경우에 한함)

「충청남도의회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원 연구모임 등록을 신청합니다.

2021년 1월 일

충남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연구모임 대표의원 이선영 (인)

충청남도의회 의장 귀하

② 의원연구모임 연구활동계획서

연구모임명		충남의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
대 표 자		이선영 의원
연 구 내용	과 제	지역, 경제, 소득, 정보,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양극화 상황 해소방안 모색
	목 적	- 사회전반의 양극화 상황과 원인 진단 - 양극화 해소방안 모색
연구활동기간		2021. 2. 1. ~ 2021. 11. 20.
연구방법·연구활동 내용 및 세부계획		「불 임」
연 구 활동비	소 요 액	5,000천원
	산출내역	「불 임」
기타사항		

※ 불 임 : 연구활동 세부계획서, 연구활동비 산출내역 각 1부

「충청남도의회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라 연구활동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1월 일

충남의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 대표의원 이선영 (인)

충청남도의회 의장 귀하

충남의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 사업계획

2021. 12

충남의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

충남의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 사업계획

1. 모 임 명 : 충남의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
2. 대 표 자 : 이선영 의원
3. 연구목적 :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경제민주화 추진을 위한 제도마련
4. 연구과제 : - 불평등과 양극화 사회대개혁 과제 해결방안 모색
- 실효성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
5. 연구방법
 - 가) 추진 주체
지역 내·외, 학계, 행정, 민간단체 등 18명 연구위원 위촉
 - 나) 추진 내용
 - 분야별 불평등 양극화 추진과제 점검(워크숍 개최)
 - 도출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검토(토론회)
 - 과제 개선 및 해결을 위한 입법 논의 및 성안(워크숍)
 - 다) 세부 추진 계획
 - ① 분야별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례연구(워크숍 개최)
 - 일시 : 2021. 2월 ~ 7월
 - 장소 : (안) 충청남도의회 회의실
 - 참석 : 연구위원 및 관련 공무원, 민간단체 대표자 20명 내외
 - 내용 : 분야별 (교육·환경·문화·행정 등) 혁신과제 도출 워크숍
 - 프로그램

일시	내용
13:30~14:00	접수
14:00~14:20	개회, 참석자 소개, 경과보고, 인사말
14:20~15:00	주제발표 1
15:00~15:40	주제발표 2
15:40~16:00	질의 응답과 종합 토론
16:00~	폐회

② 도출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검토

- 일시 : 2021. 8월 ~ 9월
- 장소 : (안) 도청 대회의실
- 참석 : 연구위원 및 관련 공무원, 도민 등 100명 내외
- 내용 : 발굴된 혁신과제에 대한 도민 토론
- 프로그램

일시	내용
13:30~14:00	접수
14:00~14:20	개회, 참석자 소개, 인사말
14:20~15:20	주제발표(6개 분야)
15:20~15:50	주제 대표 토론
15:50~16:10	질의 응답과 종합 토론
16:10~16:20	폐회

③ 과제 개선 및 해결을 위한 입법 논의 및 성안

- 일시 : 2021. 10월 ~ 11월
- 장소 : (안)충청남도의회 회의실
- 참석 : 연구위원 및 관련 공무원, 민간단체 대표자 20명 내외
- 내용 : 도출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례 제·개정 및 정책개선 과제 논의
- 프로그램

일시	내용
13:30~14:00	접수
14:00~14:20	개회, 참석자 소개, 경과보고, 인사말
14:20~15:20	주제발표(6개 분야)
15:50~16:00	질의 응답과 종합 토론
16:00~	폐회

라) 간사단 운영

- 연구팀 구성과 워크숍 운영, 사업 정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별도 간사단(4인 이내) 운영

4. 추진 일정

- 1월 중 연구 팀 구성과 과제 논의
- 2~7월 중 분야별 워크숍
- 8~9월 중 도민 토론회 개최
- 10~11월 중 조례 제·개정안 논의 및 정책 제안서 작성

5. 기대효과

-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분야별 의제 찾기와 해결방안 모색
- 관련한 조례의 제정과 개정안 및 정책과제를 마련
- 혁신 과제를 도출, 해결까지 완료하는 연구모임

Ⅱ. 연구모임 활동 경과

1. 연구모임 발족 및 제1차 토론회
2. 제1차 연구모임 토론회
3. 제2차 연구모임 토론회
4. 제3차 연구모임 토론회
5. 제4차 연구모임 토론회

1. 연구모임 발족 및 제1차 토론회

① 연구모임 발족 회의자료

**-충남의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 -
발족식 및 제1차 회의 개최**

◇ 분야별 사회 양극화 사례연구를 통하여 불평등 해소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 개최

I 회의 개요

- 일 시 : 2021. 3. 30.(화) 17:00~19:00
- 장 소 : 충남도의회 2층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209호)
- 참석대상 : 8명(의원 연구모임 구성원)
- 내 용 : 전문가 주제발표 및 자유토론

II 진행 계획

시 간			내 용	비 고
부터	까지	소요		
17:00	17:20	20'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이선영 의원
17:20	17:50	30'	• 주제발표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의 쟁점과 과제)	박경철 (충남연구원)
17:50	18:40	50'	• 토론 및 질의응답	회원 전원
18:40	18:50	10'	• 2차회의 조율 및 모임 운영방안 논의 (주제 및 발표 등)	〃
18:50	19:00	10'	• 마무리 및 폐회	이선영 의원

「충남의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 발제 자료

충남도의회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정책연구모임
2021. 3. 30

불평등과 양극화에 관한 주요 쟁점과 과제

박 경 철
사회통합연구실장

충남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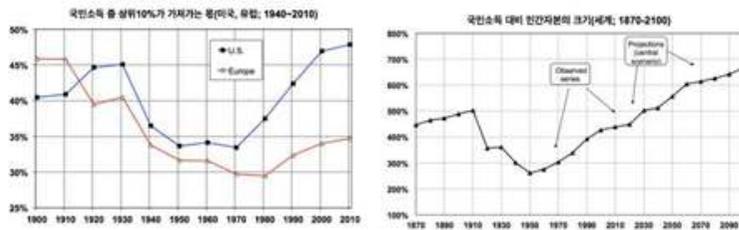
목차

1. 불평등과 양극화의 원인
2. 우리나라 불평등과 양극화의 특징
3.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방안
4. 향후 과제

❖ 불평등과 양극화의 가장 큰 이유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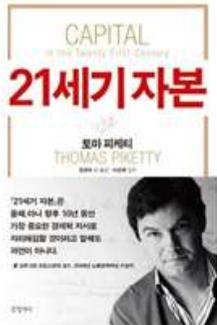
1. 소득
2. 토지/부동산
3. 교육: 고학력/전문기술
4. 세습: 부모/조부모
5. 정부의지
6. 기타

❖ 불평등과 양극화는 최근의 문제만은 아니다.



출처: 피케티, 21세기 자본

▶ 하지만 오늘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른다!



▶ 불평등의 핵심이유

r(자본의 수익률) > g(성장률)

- 자본의 수익률은 비교적 안정적
- 반면, 성장률은 인구증가의 둔화 등으로 낮아짐
- 결과적으로 r과 g의 갭이 커져 불평등 확대: 세습자본주의 확대
- 세계경제의 성장률이 둔화로 불평등 확대

▶ 불평등 해소 방안

1. 소득세 최고한계세율을 80%로 상향
: 연소득 50~100만 불 이상층 대상으로
2. 글로벌 자본세(누진세, 보유세) 부과
: 순자산 100만유로 이상에 대해 연 1%~최대 10%까지
3. 국가간 금융정보 공유로 탈세 방지
: 페이퍼 컴퍼니 방지를 위해 국가간 금융정보 방지
4. 사회적 국가 실현
: 불평등의 문제는 결국 정치의 의지 문제

K-양극화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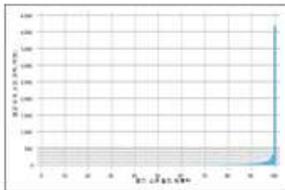


- ▶ 불평등의 핵심이유**
- 자본소득 > 노동소득
- 노동소득은 필수로 감소
 - 자본소득은 필수로 확대
 - 자본소득의 대부분은 토지 불로소득
- ▶ 불평등 해소 방안**
1. 보유세(종토세) 강화
우리나라 보유세실효세율 0.16%(2015)
OECD 평균 0.33%
 2. 양도소득세, 거래세 강화
 3. 상속세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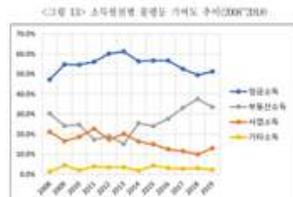
K-양극화의 특징: 부동산 불평등

> 토지소유 불평등: 법인 소유

- 2019년 토지소유 법인 270,286개 중 상위 1%가 73.3%(2018년 70.5%)
- 금액으로는 916조원(2018년 738조원)
- 상위 1개 법인 평균 소유가액 2018년 3,613억원, 2019년 4,176억원
- 부동산 지니계수 0.811(2019년) / 전체세대 중 38%는 무토지세대
- 토지소유세대 중 상위 4%가 민유지 면적 70% 소유, 지난 13년간 연평균 부동산 불로소득: GDP 대비 16.2%, 2019년 부동산 불로소득은 353조원, GDP의 18.4%
- 소득원천별 불평등 기여도: 부동산소득 > 임금소득 > 사업소득



이진수, 토지+자유연구소(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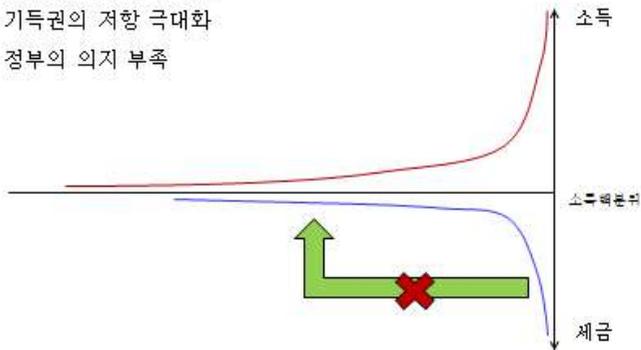


남기업, 대한민국 부동산 불평등의 실상과 해소 방안(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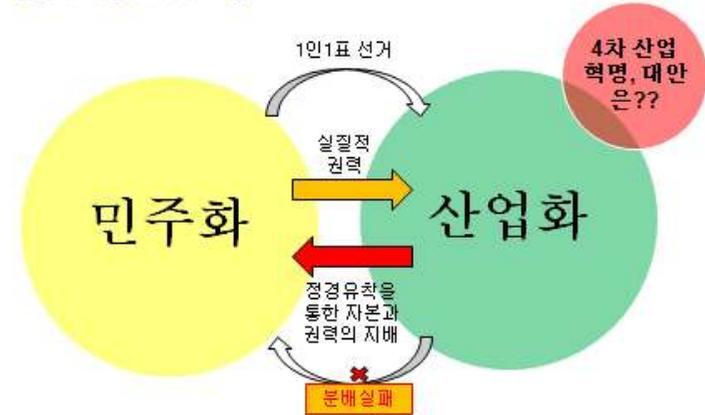
양극화와 불평등 정책의 실패 원인

> 분배정책의 실패

- 선별 정책의 한계 직면
- 기득권의 저항 극대화
- 정부의 의지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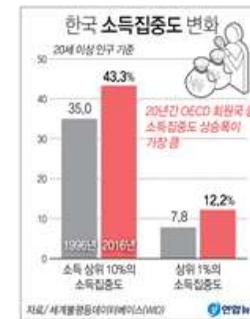


■ 우리나라 분배정책 실패의 원인: 민주화와 산업화의 모순



우리나라는 친일, 독재, 세습자본가, 화이트칼라 권력층의 강고한 기득권 카르텔로 분배정책이 제대로 작동 안됨

한국사회의 소득집중도: OECD 국가 최고수준



자료/ 세계불평등데이터베이스(ADI) | 연방뉴스
 김태일 기자 / 20190310
 페이스북: suneyal/lehi, 트위터: @yomib_graphics

상위 1% 소득점유율 (단위: %)	상위 10% 소득점유율 (단위: %)
대한민국 6.33	덴마크 26.88
프랑스 6.41	스웨덴 27.90
스페인 7.13	노르웨이 28.30
일본 7.46	뉴질랜드 30.88
노르웨이 7.80	네덜란드 30.90
프랑스 8.06	호주 30.96
뉴질랜드 8.13	스페인 31.64
스페인 8.20	핀란드 32.50
호주 9.17	프랑스 32.69
이탈리아 9.36	스위스 33.15
일본 9.51	이탈리아 33.87
포르투갈 9.77	독일 34.71
이탈리아 10.50	아일랜드 36.13
스위스 10.54	포르투갈 36.25
독일 10.86	영국 36.15
캐나다 12.22	캐나다 40.12
한국 12.23	일본 40.50
중국 12.93	한국 44.87
미국 13.34	미국 48.66

*빈곤선 이하 10% 이하의 OECD 기준 기준, 원인은 파악할 수 없음
 *빈곤선 이하 10% 이하의 OECD 기준 기준, 원인은 파악할 수 없음

공정과 분배의 실패

↓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각한 사회

↓
지속하기 어려운 사회

↓
N포 세대, 저출산, '지역소멸'..

OECD국가중: 저출산, 자살률, 노동시간 최고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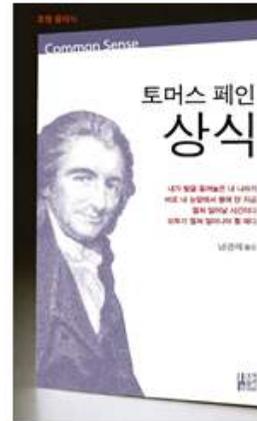
❖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의 대안: ① 기본소득제

- ▶ 개념: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소득과 직업 유무에 상관없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현금제도
- ▶ 원칙: 1) 보편성, 2) 개별성, 3) 무조건성, 4) 정기성, 5) 현금성

“기본소득(basic income)은 불평등, 양극화, 일자리 감소, 환경파괴, 심리불안으로 극도로 피폐화되고 있는 이 시대에 인간의 존엄성 보장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는 데 가장 강력한 이념적 가치이자 정치적 도구이다.”

- ✓ 우선 가능정책 실행: 아동, 청년, 농민, 농촌, 소액..
- ✓ 자원: 국토보유세, 탄소세, 데이터세, 로봇세 등

이론적 기초: 토마스 페인의 토지배당



■ 이력과 저서

- 1737년 영국 잉글랜드 출생
- 1776년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상식_Common Sense>을 출판해 미국 독립의 당위성 주장
- 1771년 <인권_Rights of Men>을 출판해 영국 군주정의 모순 비판
- 1779년 기본소득의 이론과 방법론을 제시한 <토지분배의 정의_Agrarian Justice>를 출간
- 1807년 미국에서 빈곤과 고독 속에서 생애를 마감

“물, 바람, 공기, 토지, 자연자원은 모든 사람의 것이다. 인권의 기본권은 자연권이다.”

■ 토마스 페인의 <기본소득의 필요성> 주장과 방법

“인권의 기원은 자연권이다.”

“미개간의 자연 상태였을 때 땅은 인류의 공동 재산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 상태에서는 모두가 태어날 때부터 재산을 가진다. 그러나 경작이나 이른바 문명생활과 불가분한 연관을 가진 토지 재산 제도는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아 흡수하고서도 그 손실에 대해 미망히 해야 할 아무런 보상도 해주지 않는다.”

“현재의 소유자들에게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정의에 반하는 죄를 일부러 저지른 경우가 아니라면 그들에게는 어떠한 불만도 토로할 수 없다. 잘못은 제도에 있다.... 그러나 이 잘못은 이후 세대들에 의해 시정될 수 있다. 현재 소유자들의 재산을 축소하거나 훼손하지 않고도 기금의 운영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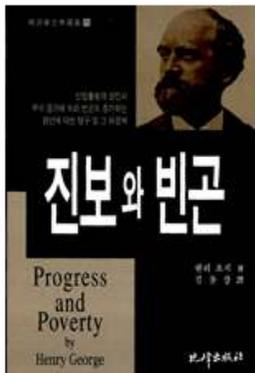
“내가 바라는 것은 자선이 아니라 권리이며, 은혜가 아니라 정의다. 현재 문명의 상태는 혐오스럽고 부당하다.”

■ 토마스 페인의 <기본소득의 필요성> 주장과 방법

시민배당 방법

연간 기금		566만 파운드
노인 40만 명에게 매년 1인당 10파운드씩 지급	400만 파운드	
21세 9만 명에게 1인당 15파운드씩 지급	135만 파운드	
		535만 파운드
잔액(비노인, 장애인)		31만 파운드

“이 계획은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모두에게 혜택을 줄 것이다. 공화국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을 함께 도모할 수 있다. 토지 재산제도에 의해 자연적 상속권을 빼앗긴 수많은 계층에게 국가적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헨리 조지
(Henry George:
1839-1897)

“왜 사회가 진보할수록 빈곤층은 많아지는가”

“토지 단일세가 필요하다. 땅은 사유 재산이 아니다.”

天下爲公

세상은 모든 이의 것

大道之行也, 天下爲公
<禮記·禮運>편

큰 道(진리)가 행해지면 세상은 모든 이의 것이 된다.

■ 천하위공과 토지분배 그리고 기본소득

동양사상

天下爲公

세상은 모든 이의 것

실천방법

공전제

정전제
균전제
여전제

실천목표

大同世上

모두가 함께사는 세상

중국고서 《禮記》 편: '진리가 행해지면 세상은 모든 이의 것이 되며 이를 대동(大同)이라고 말한다'

❖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의 대안: ② 기본(초)자산제

- 개념: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로 계층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생애주기별 일정한 자산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제도
- 원칙: 1) 보편성(—), 2) 개별성, 3) 무조건성, 4) 정기성(—), 5) 현금성

김두관 의원 "양극화 현실 타개위해 기본자산 도입"



기본소득으로는
실질적 자유 실현
어려움

신생아 기본자산제,
청년 기본자산제
우선 실행

❖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의 대안: ③ 이득공유제

- 개념: 코로나로 인해 이득을 보는 기업이 이익을 중소기업, 소상공인, 시민에게 공유
- 원칙: 코로나라는 특수상황에서 도입 추진하지만 항구적 공유체제 가능

✓ 대상 기업
반도체와 가전, 배달, IT
등 플랫폼·비대면 기업

✓ 실시 사례
무역이익공유제를 통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 반대 논리
-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이익을 특정하기 어려움
- 주주의 재산권 침해
- 현재도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성과공유제 실시

❖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의 대안: ④ 주4일근무제

- 개념: 4차산업혁명, 인공지능 등으로 일자리 감소에 대응
- 원칙: 주4일 근무를 통해 일자리를 나누고 저출생도 극복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주4일근무제 세계 각국 현황						
일본	차산업, 정규직에 한해 주 4일 근무 허용하는 정책 준비 중					
스페인	회합업체에 한해 주 4일 근무 시 3년간 정부가 지원해 주는 방안 논의 중					
뉴질랜드	최신디이안 총리가 지난해 5월 주4일제 근무 제안					
영국	노동당에서 2019년 총선에서 주4일근무제 공약					
한국	선나 대한 총리가 주 4일, 하루 6시간 근무제 제안					
미국	대통령인출상 박연선 서울시장 후보 주4.5일근무제 공약					

✓ 긍정 측면
웨라벨 가능, 일자리
나눔, 저출생 극복

✓ 부정 측면
기업의 생산성 감소,
정규직 혜택, 재정 부담

서울신문, 2023. 3. 23

❖ 논의 과제

- 불평등과 양극화 논의 범위 설정
 - 1) 사회적 범위: 사회보장, 사회분배, 사회혁신, 세대, 계급 등
 - 2) 문화적 범위: 역사, 관습 등
 - 3) 경제적 범위: 재정, 금융, 산업구조, 토지, 부동산, 기술발전 등
 - 4) 지리적 범위: 수도권, 비수도권, 도시, 농촌 등
- 국가의 역할: 법, 제도의 문제 등
- 지자체의 역할: 충남도 및 15개 시군

② 제1차 연구모임 결과: 언론보도



2. 제2차 연구모임 토론회

① 제2차 연구모임 토론회 회의자료

-충남의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 - 용역 착수보고회 및 제2차 회의 개최

◇ 2021년도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추진과제에 대한 착수보고 및 제2차 연구모임 개최

I 회의 개요

- 일 시 : 2021. 7. 8.(목) 16:00~18:00
- 장 소 : 충남도의회 2층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209호)
- 참석대상 : 약10여명(연구모임 회원, 사회통합분야 전문가)
- 내 용 : 연구계획(착수) 보고, 전문가 자문 및 의견 수렴

II 진행 계획

시 간			내 용	비 고
부터	까지	소요		
16:00	16:10	10'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이선영 의원
16:10	16:40	30'	• 연구용역 착수 보고 (충남 이주민의 안전한 체류를 위한 지원정책 제안)	윤 향 희 (충남연구원)
16:40	17:40	60'	• 종합 토론(연구용역 추진방향 등 논의)	회원 전원
17:40	17:55	15'	• 3차모임 논의(주제 및 발표 등)	회원 전원
17:55	18:00	5'	• 용역착수보고회 마무리 및 폐회	이선영 의원

② 제2차 연구모임 토론회 결과: 보도자료

HOME > 뉴스 > 정치

이선영 충남도의원, 이주민 체류 지원정책 착수보고회 개최

이철우 | 승인 2021.07.08 23:01 | 댓글 0



충남 이주민의 안전한 체류를 위한 지원정책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장면. ©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가 도내 이주민의 안전한 체류를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충남도의회 '충남의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대표 이선영 의원)'은 8일 충남 이주민의 안전한 체류를 위한 지원정책 제안(고려인 교육지원을 중심으로)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충남 체류 외국인 중 고려인 사례를 중심으로, 근로 및 생활의 가장 기반이 되는 교육분야를 집중 분석하고 이를 통해 충남 이주민 체류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의뢰했다.

회원들은 이날 착수보고회에서 연구용역 총괄책임자인 충남연구원 윤항희 책임연구원의 '충남 이주민의 안전한 체류를 위한 지원정책제안-고려인 교육지원을 중심으로' 발표를 청취하고 연구용역 수행 방향을 논의했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충남 체류 고려인은 1만 2000명으로 추산되며, 특정 지역에 자녀를 동반한 집단 거주 형태를 이루어 생활하고 있다.

자녀와 함께 체류하고 있는 고려인은 자녀교육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나 한국어의 부족으로 학습 부진과 또래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트자 역시 근로현장 수작업을 전수를 위한 안전교육과 한국어 교육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연구모임 대표인 이선영 의원(정의당, 비례)은 "이주민이 충남 지역사회에서 겪고 있는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제도 정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연구용역을 통해 충남 내 이주민이 안전하게 체류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남=이철우 기자

3. 제3차 연구모임 토론회

① 제3차 연구모임 토론회 개최

-충남의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 -
용역 중간보고회 및 제3차 회의 개최

◇ 2021년도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추진과제에 대한 중간보고
 및 제3차 연구모임 개최

I 회의 개요

- 일 시 : 2021. 9. 24.(금) 16:00~18:00
- 장 소 : 충청도의회 2층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209호)
- 참석대상 : 약10여명(연구모임 회원, 사회통합분야 전문가)
- 내 용 : 연구계획(중간) 보고, 전문가 자문 및 의견 수렴

II 진행 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부터	까지	소요		
16:00	16:10	10'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이선영 의원
16:10	16:40	30'	• 연구용역 중간보고 (충남 이주민의 안전한 체류를 위한 지원정책 제안)	윤 향 희 (충남연구원)
16:40	17:40	60'	• 종합 토론	회원 전원
17:40	17:55	15'	• 최종보고회 및 4차모임 논의	회원 전원
17:55	18:00	5'	• 용역 중간보고회 마무리 및 폐회	이선영 의원

② 제3차 연구모임 결과: 언론보도



4. 제4차 연구모임 토론회

① 제4차 연구모임 토론회 개최

**-충남의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
용역 최종보고회 및 제4차 회의 개최**

◇ 2021년도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추진과제에 대한 최종보고 및 제4차 연구모임 개최

I 회의 개요

- 일 시 : 2021. 10. 20.(수) 15:00~
- 장 소 : 충남도의회 2층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209호)
- 참석대상 : 약10여명(연구모임 회원, 사회통합분야 전문가)
- 내 용 : 연구용역(최종) 보고, 4차 회의(주제발표 및 토론)

II 진행 계획

시 간			내 용	비 고
부터	까지	소요		
15:00	15:10	10′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이선영 의원
15:10	15:40	30′	• 연구용역 최종 보고 (충남 이주민의 안전한 체류를 위한 지원정책 제안)	윤 향 희 (충남연구원)
15:40	16:10	30′	• 토론 및 질의응답	회원 전원
16:10	16:15	5′	• 용역 중간보고회 마무리	회원 전원
16:15	16:25	10′	• 휴식 및 정리	
16:25	16:55	30′	• 주제발표(연구모임 주제)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16:55	17:25	30′	• 토론 및 질의응답	회원 전원
17:25	17:30	5′	• 연구모임 마무리 및 폐회	이선영 의원

② 제3차 연구모임 토론회 발제자료

부동산 불평등과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 방안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부동산 공화국의 현실

토지의 중압 (重壓) : 전세계에서 땅값이 제일 비싸다

<OECD 주요국의 GDP대비 지가 비율 추이>

<부동산 불로소득 추이 (2007~2019)>

- 한국의 2020년 GDP 대비 지가는 5.01배인데, 이는 영국(3.12), 오스트리아(1.75), 캐나다(2.23), 핀란드(0.82), 벨기에(1.54), 네덜란드(1.79), 미국(2.57)보다 2~3배 높을 수 있음
- 높은 땅값을 생산에 필요한 비용, 개발 비용, 주거 비용의 차인

부동산 공화국의 현실 : 개인

토지소유와 주택소유 불평등이 극심하다 (개인)

- ▶ 2020년 현재 전체 세대의 38.8%는 無토지세대
- ▶ 다주택자 증가
- ▶ 2020년 현재 개인토지의 지니 계수 0.811
 - * 지니 계수 변화 추이 : 1945년(0.73) - 1960년(0.38~0.39) - 2018년(0.809) - 2019년(0.811) - 2020년(0.811)
 - ** 2019년 가구소득의 지니 계수 0.345, 순자산 지니 계수 0.597

<주택 이외 거처 거주 가구 비율(저소득)>

<주택소유자수 추이(2012~2019)>

부동산 공화국의 현실 : 기업

토지 소유 불평등이 극심하다(기업)

- ▶ 토지소유 법인 중 상위 1% 소유 가액 변화 : 2018(738조원) - 2019(916조원) - 2020년(1,045조원)
- ▶ 상위 1% 법인 1개당 평균 소유가액 변화 : 2018(3,613억원) - 2019(4,176억원) - 2020년(4,426억원)

법인의 토지소유 100분위별 평균 소유가액 (2020년)

법인 상위 1%의 토지소유 가액점유율 추이

* 토지를 소유한 법인은 336,135개

부동산 공화국의 현실 : 아파트 민주주의

- '이유 있는' 무관심 : 부동산 불로소득
- 불로소득을 탐하는 마음과 공동체에 대한 관심은 상극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욕심 가득하고 몰상식한 사람들의 놀이터 → 상식적인 사람들은 회피
- 재건축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는 아파트 민주주의



부동산 공화국의 결과



부동산 공화국과 부동산 체제

- 부동산 공화국은 '체제'로 작동해왔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 그러므로 대중적 처방은 곤란.
-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을 위해서 대출규제를 완화하거나 전세가 오르면 전세대출을 늘려야 한다는 정책으로는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곤란.
- 대한민국 부동산 체제의 성격은 '불로소득 유발형'. 이 체제 하에서 공공과 민간(가계와 기업)이 불로소득 추구 경쟁을 벌려 온 것이 그동안의 역사. 핵심은 불로소득을 완전히 환수하는 체제로 전환하는 것!
- 토지 중심적 관점에 섰을 때 불로소득이 파악되고, 주거를 넘어서 부동산 전체를 아우르는 체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음.

체제 전환의 핵심 : 불로소득 유발형 - 불로소득 환수형



기본소득의 시대가 오고 있다!

- 4차 산업혁명시대와 불안정 일자리 증가, 그리고 복지국가의 한계
- 대한민국에서 사회권을 획득한 기본소득
- 관건은 **재원 마련!**
- 가장 좋은 **재원의 조건**
 1. 필요가 아니라 권리 : 재원에 대한 '권리'에 있어서 철학적, 경제학적 근거가 분명할 것
 2. 재원 마련 자체가 불평등 해소에 도움이 될 것
 3. 재원 마련 자체가 생산활동 촉진에 도움이 될 것
 4. 재원 마련 자체가 환경보전에 도움이 될 것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부동산 세제 : 국토보유세 (國寶稅) 시산 (2022년)

과세구간과 세율

	과세구간	개인	법인/비법인
구간1	0~1억원	0.3%	0.3%
구간2	1~5억원	0.5%	0.5%
구간3	5~10억원	1.0%	1.0%
구간4	10~20억원	1.2%	1.2%
구간5	20~50억원	1.4%	1.4%
구간6	50~100억원	1.6%	1.6%
구간7	100~억원	1.7%	1.7%

시산표

2022년 추정액	52.8조 원
2022년 재산세 토지분	11.4조 원
재산세 토지분 차감 후	41.4조 원
2022 인구추계	51,846,339
1인당 기본소득액(연)	79.9만 원
세대당 인구	2.22
세대당 지급액	177.4만 원
시가 1주택 3인가구 순부담 가구(4인가구)	16억 원(19억 원)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0.42%
토지보유세 실효세율	0.67%
순수혜 세대 비율	94.5%

국보세의 예상 효과

핵심 : 가계의 경제적 유인구조 변화 (부담 → 혜택)

- 투기용 부동산이 시장에 등장하면서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화
 - 투주택자>유주택자, 1주택자>다주택자, 종적가주택>고가주택, 소농/소작농>대농
 - 반값 150만 채와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주택과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의 일괄정도가 시장에 출회
- 부동산 때문에 발생하는 불평등 감소
- **지가 안정과 소득분배 개선으로 경제 활성화, 농지투기 감소**

많은 주 정부들은 민간으로부터 기본소득을 사들인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드이 많이 드는 방법이다. 우리는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도 농지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재산세에서 건물과 토지에 차별적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도시 내에 이용되지 않는 토지가 있기 때문에 주변의 농지와 녹지가 개발에 잠식당하는 것입니다. 차별적 세율 정책은 도시 내에서 이용되지 않고 있는 토지의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주변의 농지를 보존합니다(Walter Rybeck, 2000. "United States," in Robert V. Andelson ed. Land-Value Taxation Around the World" BLACKWELL, p. 172)
- 재벌의 경제적 위상 하락과 신규기업과 중소기업의 영향력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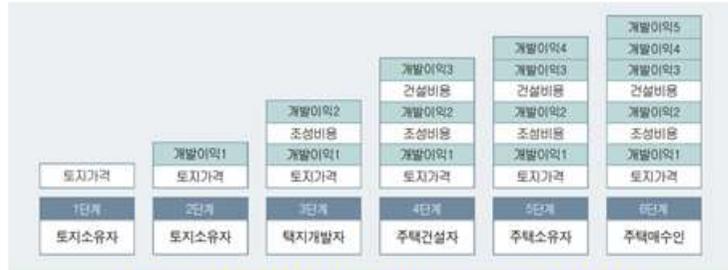
정책 담당자 :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 신탁제도 도입

핵심 : 부동산 정책의 국민적 신뢰도의 획기적 제고

- 1급 이상 공무원과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에 취임할 당시 실수요 아닌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는 제도.
- 신탁된 부동산의 감정가와 매각 혹은 공직을 떠날 때까지의 이자만 인정.
- 고위공직자부동산백지신탁제를 도입하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상승.
- 유능한 고위공직자 후보 인재풀을 확보할 수 있고, 부동산 불로소득을 탐하지 않는 인재들의 고위 공직의 등용 가능성이 제고됨.
- 이것은 일찍이 대한민국에서 한 번도 실행된 적이 없었던 권력 상층부의 특권 내려놓기 공약

임대형 토지공급 정책 : 대장동 사태의 근본 해법

- ▶ 100% 공영개발하면 개발이익을 완전히 환수할 수 있나? 문제는 공공택지를 매각하는 것. 앞으로 공공택지는 '매각'에서 '임대'로



임대형 토지공급정책 → 개발이익 2~5 원천 차단

부동산 공급 : '토지임대부' 공급

-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 자가보유 장벽이 획기적으로 낮은 주택(평균 600만 원)
 - 부채 의존 주택 소유에서 탈피 → 자가보유율 증가
 - 공공임대주택의 꾸준한 공급 → 전 국민의 주거권 실현 가능성 제고
- ▶ 토지임대부 분양상가
 - 상가 세입자와 소상공인의 건물 소유 가능성 획기적 제고
 - 상가세입자 보로도를 넘어서 건물 소유주
- ▶ 토지임대부 산업단지
 - 목돈 없어도 시장 진입 가능
 -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에 몰두하는 기업 증가

임대차 문제 해결의 방향

- ▶ 상가임차인 보호와 주택임차인 보호를 동일하게!
 - 현행 2+2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의 최장 임대차 기간에 맞춰 10년(2+2+2+2)으로
 - 임대인은 임대인 본인이 임차목적물에 직접 거주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곤 임차인의 계약 갱신청구권을 거절하지 못하게 함
- ▶ 신규임대료 규제
 - 주택 공시가격의 90%
- ▶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꾸준히 공급 → 자가보유 가구 증가 → 임대수요 감소
 - 장기임대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 임대수요 감소

부동산 공화국 혁파를 위한 4가지 핵심 정책

투기 차단	국보세 주택을 포함한 모든 부동산에 투기가 차단되고 부동산 시장이 실수요자로 재편
주택 공급	토지임대부 주택 일정한 부채를 일으키지 않고도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분양형 기본주택과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도 30년 이상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장기임대형 기본주택 공급
토지 공급	임대형 토지공급정책 대장동과 같이 민관합동개발이 아니라 공영개발로, 매각을 통한 불로소득 환수가 아니라 임대를 통한 불로소득 차단
사람	고위 공직자부동산백지신탁제 부동산 정책의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제고

② 제1차 연구모임 결과: 언론보도

2021년 10월 21일 (목)
종합 03면

충청신문



20일 '충남의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 개최 모습. (사진=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 “체류 고려인에 교육·보육 지원”

양극화 해소 연구모임, 정착 지원 전문기관 설치 등 제안

충남도의회가 고용불안과 언어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체류 9000여 명의 고려인들을 위한 정착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충남의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은 20일 '충남 이주민의 안전한 체류를 위한 지원정책 제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용역의 총괄책임자인 충남연구원 윤환희 연구원은 최종 보고에서 ▲노동안전, 지역사회 화합 등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고려인 자녀의 교육환경

구축 및 보육 지원 ▲정착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설치 등을 제안했다.

연구모임 대표인 이선영 의원(비례·정의당)은 “고려인들의 안정적인 충남 정착을 위해서는 현실적인 한국어 교육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오늘 회의에서 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을 반영해 연구용역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고, 정책 제안과 관련 부서의 정책 실행을 통해 이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석원 기자 001hong@dailycc.net

112 X 160 mm

Ⅲ. 충남의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과제 연구

1. 배경 및 목적
2. 불평등과 양극화의 원인과 논의 동향
3. 충남도의 불평등과 양극화 실태와 정책 방향
4. 향후 정책 과제

1. 배경 및 목적

○ 불평등과 양극화는 최근의 문제는 아니지만 최근에 들어와서 더욱 심화되고 있음

- 지난 100년 동안 불평등을 분석한 프랑스 경제학자 피케티에 의하면 전세계적으로 불평등과 양극화는 100년 전에도 지금과 같이 심했음
- 이후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완화되었는데 그 이후 다시 경제가 성장이 되면서 불평등과 양극화는 더욱 심화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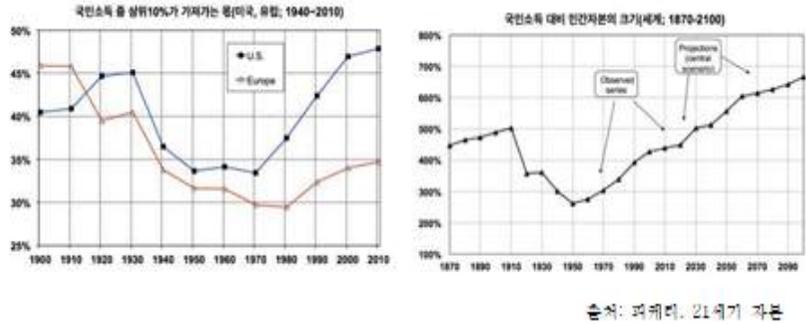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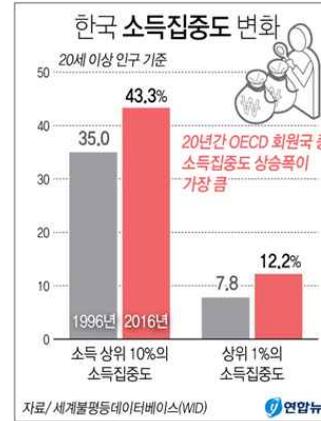


그림1 지난 100년 동안 세계 주요국 불평등 추이

○ 최근 불평등과 양극화의 특징은 극히 소수가 대부분의 부를 차지하고 있음

- 이전 불평등과 양극화는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50% 정도를 차지하는 형태였으나 오늘날에는 상위 5%, 상위 1%, 또는 상위 0.1%가 많은 부를 차지하는 특징임



김토일 기자 / 20190310
페이스북 tunej.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상위 1% 소득점유율 (단위: %)		상위 10% 소득점유율 (단위: %)	
네덜란드	6.33	덴마크	26.88
덴마크	6.41	스웨덴	27.90
스웨덴	7.13	노르웨이	28.33
핀란드	7.46	뉴질랜드	30.88
노르웨이	7.80	네덜란드	30.90
프랑스	8.08	호주	30.98
뉴질랜드	8.13	스페인	31.64
스페인	8.20	핀란드	32.50
호주	9.17	프랑스	32.69
이탈리아	9.38	스위스	33.15
일본	9.51	이탈리아	33.87
포르투갈	9.77	독일	34.71
아일랜드	10.50	이탈랜드	36.13
스위스	10.54	포르투갈	38.25
독일	10.88	영국	39.15
캐나다	12.22	캐나다	40.12
한국	12.23	일본	40.50
영국	12.93	한국	44.87
미국	19.34	미국	48.16

*파리경제대학 DB에 등록된 OECD 가입국 기준. 한국은 19개국 중 3위 (자료: 세계 상위소득 데이터베이스)
*한국은 4개국 중 2위

그림2 한국의 소득집중도 현황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불평등과 양극화의 원인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 동향을 살펴보고 향후 충남도 차원의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특히 본 연구에서는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최근 정책 동향 파악과 함께 충남도의 불평등과 양극화의 실태를 분석하고 향후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II. 불평등과 양극화의 원인과 논의 동향

1. 불평등과 양극화의 원인

1) 성장률보다 자본의 수익률이 더 빠름

○ 자본의 수익률은 비교적 안정적인 반면, 성장률은 인구증가의 둔화 등으로 낮아짐.
즉, $r(\text{자본의 수익률}) > g(\text{성장률})$ 공식이 성립됨

- 결과적으로 r과 g의 갭이 커져 불평등 확대: 세습자본주의 확대

- 세계경제의 성장률이 둔화로 불평등 확대

2) 자본소득이 노동소득보다 많음

○ 노동소득은 갈수록 감소하고 자본소득은 갈수록 확대되기 때문에 불평등과 양극화가 확대됨

- 특히, 자본소득의 대부분은 토지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불평등과 양극화가 고착화, 영속화되어가고 있음

- 불평등의 척도로 알려진 피케티지수(가계와 정부의 순자산을 합한 국부를 국민순소득으로 나눈 것)를 보면 2010년 7.4에서 점점 증가해 2019년에는 8.8에 이름



그림3 한국 피케티지수 추이(경향신문 2020. 10. 30)

3) 부동산자산의 편중 현상 가속

○ 불평등과 양극화의 핵심은 토지소유의 불평등임. 그중에서도 핵심은 법인 소유 부동산의 편차임

- 2019년 토지소유 법인 270,286개 중 상위 1%가 73.3%(2018년 70.5%) 차지함. 금액으로는 916조원(2018년 738조원)임

- 상위 1개 법인 평균 소유가액 2018년 3,613억원, 2019년 4,176억원

- 부동산 지니계수 0.811(2019년) / 전체세대 중 38%는 무토지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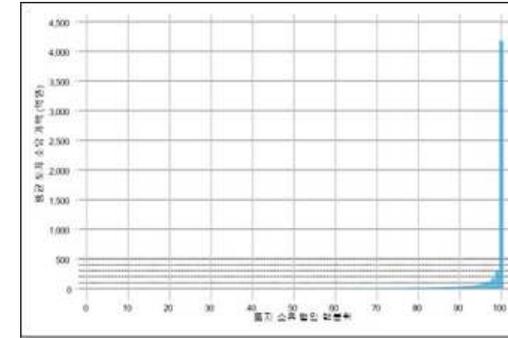


그림3 토지 소유법인 백분위(남기업, 2021)

○ 토지소유세대 중 상위 4%가 민유지 면적 70% 소유

- 지난 13년간 연평균 부동산 불로소득은 GDP 대비 16.2%, 2019년 부동산 불로소득은 353조원, GDP의 18.4%에 달함

- 소득원천별 불평등 기여도: 부동산소득 > 임금소득 > 사업소득

- 부동산에 지나치게 몰두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 심화, 생태환경의 파괴, 기업에 투기에 몰두, 공직자들의 부패가 가중되어 결국은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험해짐



그림4 부동산 공화국의 경과(남기업, 2021)

2.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방향(토마 피케티의 제안)

1) 소득세 최고한계세율을 80%로 상향

○ 연소득 50~100만 불 이상을 대상으로 소득세 최고한계세율을 80%로 상향

- 우리나라는 소득세와 함께 자산에 대한 보유세 강화가 필요함
- 우리나라 보유세 실효세율 0.16%(2015)로 OECD 평균 0.33%에 약 절반 수준임

2) 글로벌 자본세(누진세, 보유세) 부과

○ 순자산 100만유로 이상에 대해 연 1%~최대 10%까지 부과

3) 국가간 금융정보 공유로 탈세 방지

○ 페이퍼 컴퍼니 방지를 위해 국가간 금융정보 공유

4) 사회적 국가 실현

○ 불평등과 양극화의 문제는 결국 정치의 의지 문제임

-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정치 지도자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함

※ 토마 피케티의 제안은 대부분 국가 차원의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방안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는 이를 실현하기가 쉽지 않는 실정임

III. 충남도의 불평등과 양극화 실태¹⁾

1. 충남도 불평등과 양극화 특징

○ 충남도 사회양극화 특징은 지역 내 산업분포의 차이로 인한 경제사회적 양극화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음

- 충남도내 기업분포와 경제비중을 보면, 천안, 아산, 서산, 당진 등 북부권 4개 시가 충남 전체 GRDP의 74.2%를 차지하고 그중, 천안, 아산 두 지역이 전체의 50.7% 정도를 차지함

○ 충남도내 불평등한 산업구조는 불평등한 인구구조를 낳게 됨

- 대기업 등 산업구조가 상대적으로 우세한 북부권 4개 시에는 비교적 젊은 인구가 많고 인구수도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그 외 지역은 고령인구가 많고 인구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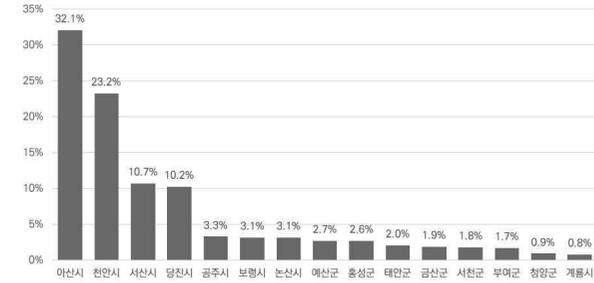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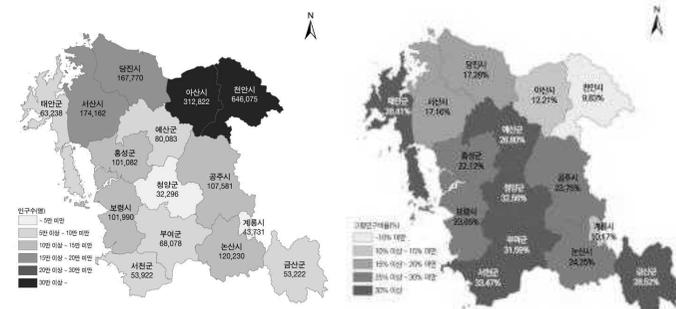


그림5 충남 15개 시군의 GRDP 비중(2016년 기준)

자료 : 충청남도, 지역내총생산 2018

○ 제조업이 우세한 충남 북부지역과 농업이 우세한 남부지역 간 격차는 충남도 양극화의 최대 현안이라고 할 수 있음

-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지역의 산업구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업적 측면 이외 다양한 접근 방법이 필요함



시군별 인구규모(2018)

고령인구비율(2018)

그림5 충남의 인구 및 고령인구 비율(2018년 기준)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통계, 백운성 외(2020).

1) 본 장의 대부분의 내용은 박경철 외(2021) "충남도 사회양극화 정책 평가 및 대응과제 연구"에서 인용함.

- 사회양극화 정도를 잘 보여주는 지표 중의 하나인 소득 10분위 배율을 보면 충남도는 전국보다 심하지는 않지만 최근 들어 양극화 속도는 전국 평균을 앞지르고 있는 상태임
- 소득 1분위 대비 10분위 배율을 보면, 2008년에 전국 9.9, 충남 9.5에서 점점 증가하다 2010년을 기점으로 하락해 2011년에는 8.5로 갈아집. 이후 다시 증가해 2018년 기준으로 전국 13.3, 충남 12.3으로 동시에 증가했다.
- 특히 충남은 2017년 10.7에서 2018년 12.3으로 1.6이 증가해 같은 기간 전국 증가 1.2보다 높아 양극화 증가 속도가 전국 평균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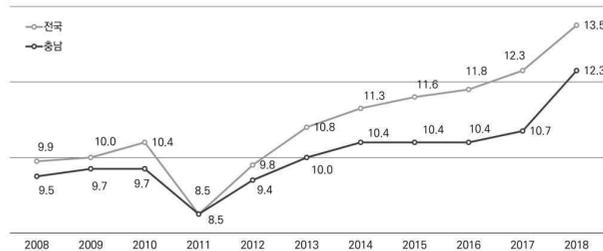


그림6 1분위 대비 10분위 배율(상위 10%와 하위 10%)

자료 : 지역별고용조사(2008~2018)를 활용하여 작성

- 2019년 기준 충청남도는 시도별 지역총소득은 전체 17개 시도 가운데 울산광역시, 서울특별시 다음으로 3위 차지
- 하지만 1인당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은 모두 11위로 나타나 1인당 지역총소득 순위와는 많은 차이를 보임. 충청남도의 지역총소득이 충남도민 개인이나 가구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표1 시도별 지역총소득, 개인소득, 가구소득 순위(2019년)

구분	1인당 지역총소득 (천원)(순위)	1인당 개인소득 (천원)(순위)	가구소득 (만원)(순위)
평균	37,530	20,400	5,924
서울특별시	49,121(2)	23,400(1)	6,575(2)

부산광역시	29,388(15)	19,680(7)	5,402(9)
대구광역시	27,798(17)	19,210(9)	5,288(14)
인천광역시	32,571(9)	19,332(8)	6,075(5)
광주광역시	30,964(12)	20,532(3)	6,030(6)
대전광역시	31,548(11)	20,498(4)	5,714(7)
울산광역시	54,969(1)	22,550(2)	6,445(4)
세종특별자치시	34,983(5)	19,789(6)	7,425(1)
경기도	38,466(4)	20,482(5)	6,503(3)
강원도	29,392(14)	18,997(10)	4,924(16)
충청북도	34,484(8)	18,823(13)	5,275(15)
충청남도	40,953(3)	18,955(11)	5,334(11)
전라북도	28,260(16)	18,725(15)	5,340(10)
전라남도	35,532(6)	18,711(16)	5,290(13)
경상북도	34,873(7)	18,611(17)	4,883(17)
경상남도	32,140(10)	18,939(12)	5,303(12)
제주특별자치도	30,834(13)	18,734(14)	5,531(8)

자료 : 김태환 외(2021), 『지역별 소득 격차와 불평등』을 참고로 재정리.

- 한편, 2020년 기준 시도별 사회복지비²⁾ 비율을 보면, 충남도는 32.13%로 광역시도 평균 40.92%(전국 평균 39.37%)보다 8.79%p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시도별 순위를 보면, 충남도는 17개 시도 가운데 14위로 충남도보다 낮은 자치단체는 강원 29.17%, 제주 26.77%, 전남 25.33% 3군데뿐인 것으로 나타남



그림7 시도별 사회복지비 비율(2020년)

자료 : 지방재정통계공개시스템 지방재정365

- 2) 사회복지비란 지방자치단체가 1년간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등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금액을 의미한다.
 - 산정기준 : 총계, 결산, 최종
 - 산정공식 : (사회복지분야 결산액÷세출결산액)×10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 충남도민의 불평등과 양극화 인식 실태

1) 설문조사 개요

- 충남도민의 불평등과 양극화에 대한 인식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함. 설문조사 개요는 다음과 같음.

표2 충남도민 대상 사회양극화 인식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목적	사회양극화에 관한 충남도민의 인식실태, 정책선호도, 정책제안 등을 파악
조사지역	충청남도 전체 15개 시·군
표본크기	1,050명
조사 내용	사회양극화에 대한 충남도민의 인식 실태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선호도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제안
자료수집방법	일대일 개별 면접조사
조사대상자	충남도민
조사기간	2021. 06. 15. ~ 2021. 07. 14(1개월) (조사실행기관: 선인리서치)

2) 사회양극화 평가

- 현재 우리나라 사회양극화에 대한 응답 결과를 보면, '다소 심각함'이 54.8%로 가장 많았고, '매우 심각함'은 23.4%로 나타남
- 이 둘을 더하면 충남도민의 78.2%는 우리사회의 양극화가 심각하다고 생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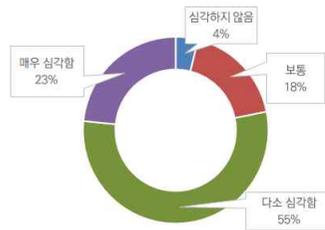


그림8 우리나라 사회양극화 정도

- 우리나라 사회양극화가 심각하다(다소 심각함+매우 심각함)는 응답한 결과를 보면, 성별에서는 남자(78.9%), 연령대로는 30대(89.8%, 1순위), 20대(85.3%), 학력으로는 고졸(81.5%), 월소득은 200-400만원 미만(84.5%), 직업으로는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88.1%), 단순노무종사자(86.2%),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82.9%) 순이며, 계층의식에서는 중하층(89.2%), 정치성향은 보수(84.3%), 거주행정단위는 면지역(80.3%)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요약하자면, 연령이 낮고, 소득수준이 낮으며 직업적으로는 기능직과 판매종사자, 계층적으로는 중하층, 정치성향으로 보수층, 지역적으로 농촌지역에서 우리사회의 양극화 정도가 심각하다고 평가함

표3 현재 우리나라 사회양극화 정도

		(사례 수)	심각하지 않음	보통	다소 심각함	매우 심각함	평균 (5점 척도)
[전체]		(1050)	3.9	17.9	54.8	23.4	3.98
성별	남자	(553)	3.8	17.4	53.2	25.7	4.01
	여자	(497)	4.0	18.5	56.5	20.9	3.94
연령대	20대	(170)	3.5	11.2	53.5	31.8	4.14
	30대	(186)	2.2	8.1	59.7	30.1	4.18
	40대	(234)	5.6	17.5	59.4	17.5	3.89
	50대	(256)	4.7	26.2	48.8	20.3	3.85
	60대 이상	(204)	2.9	22.5	53.4	21.1	3.93
학력	중졸이하	(124)	1.6	22.6	54.8	21.0	3.95
	고졸	(454)	2.9	15.6	55.5	26.0	4.05
	전문대졸	(155)	3.9	18.1	56.1	21.9	3.96
월소득	대졸이상	(317)	6.3	19.2	53.0	21.5	3.90
	200만원 미만	(102)		16.7	58.8	24.5	4.08
	200-400만원 미만	(330)	3.0	12.4	54.5	30.0	4.12
	400-600만원대	(336)	5.1	14.3	57.4	23.2	3.99
직업	600만원 이상	(282)	5.0	29.1	50.4	15.6	3.77
	관리자	(36)	19.4	33.3	44.4	2.8	3.31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32)	9.4	40.6	40.6	9.4	3.50
	사무종사자	(174)	2.9	17.8	54.6	24.7	4.01
	서비스 종사자	(170)	6.5	14.7	60.0	18.8	3.91
	판매종사자	(157)	0.6	17.2	52.2	29.9	4.11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52)	2.6	21.7	55.9	19.7	3.93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82)	4.9	12.2	52.4	30.5	4.09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42)	2.4	9.5	71.4	16.7	4.02
	단순노무종사자	(29)	3.4	10.3	48.3	37.9	4.21

	주부	(81)	1.2	19.8	51.9	27.2	4.05
	학생	(63)	3.2	15.9	50.8	30.2	4.08
	무직	(32)	3.1	12.5	65.6	18.8	4.00
계 층 의 식	하층	(99)	1.0	13.1	64.6	21.2	4.06
	중하층	(471)	0.8	10.0	60.1	29.1	4.17
	중층	(404)	4.0	26.0	50.0	20.0	3.86
정 치 성 향	중상층	(76)	26.3	30.3	34.2	9.2	3.26
	보수	(108)	0.9	14.8	51.9	32.4	4.16
	중도보수	(257)	6.2	25.3	49.0	19.5	3.82
	중도	(327)	3.1	18.0	57.8	21.1	3.97
	중도진보	(293)	2.7	13.3	59.7	24.2	4.05
거 주 행 정 단 위	진보	(65)	9.2	13.8	44.6	32.3	4.00
	읍	(322)	4.0	16.1	54.0	25.8	4.02
	면	(284)	2.8	16.9	59.5	20.8	3.98
	동	(444)	4.5	19.8	52.3	23.4	3.95

3) 부문별 사회양극화 평가

- 우리사회의 양극화 양상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남. 본 연구에서는 사회양극화 부분은 크게 소득(근로소득), 소득(연금), 일자리(정규직과 비정규직) 일자리(대기업과 중소기업), 부동산(소유), 자산(현금, 주식 등), 교육, 문화·여가, 지역(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도시와 농촌)으로 나눠 조사함
- 조사 결과(10점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양극화 정도가 심각), 충남도민은 부동산 소유(8.05)가 사회양극화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함
 - 다음으로는 자산(현금, 주식 등)(8.04), 소득(근로소득)(8.01), 일자리(대기업과 중소기업)(7.91), 소득(연금)(7.72), 지역(도시와 농촌)(7.69), 지역(수도권과 비수도권)(7.56), 문화·여가(7.24), 교육(6.92) 순으로 나타남
 - 전체적으로 보면, 충남도민은 사회양극화와 관련해 부동산과 자산 격차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했고 다음으로 소득 격차와 일자리 격차, 지역 간 격차를 꼽았고 문화·여가 격차, 교육 격차는 상대적으로 심각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함



그림8 부문별 사회양극화 인식 정도

4) 사회양극화의 주요 원인

- 우리사회 양극화의 원인은 어느 하나로 대표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지역 등 다양한 문제에서 기인함
 - 따라서 충남도민이 생각하는 우리사회 양극화의 원인을 조사함.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충남도민이 생각하는 사회양극화의 원인으로 ‘불평등한 부동산 소유’(40.2%)가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38.5%), ‘불안정한 노동증가(비정규·플랫폼노동 등)’(29.0%), ‘수도권 위주의 발전정책’(26.4%)이 비교적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학벌을 중시하는 사회풍토’(19.9%), ‘농촌지역에 대한 차별’(14.4%), ‘연공서열에 따른 임금체계’(12.0%), ‘사회보장체계의 미흡’(10.4%) 등이 비교적 낮게 나타남
 - 결과적으로 우리사회 양극화의 핵심은 자산과 임금 격차가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책 마련이 필요함



그림8 사회양극화의 주요 원인

5) 사회양극화 해소 정책 선호도

(1) 소득보장정책 부문

○ 소득보장 부문 5가지 정책 가운데 충남도민이 가장 선호하는 정책은 ‘근로장려금 확대’가 4.11점(5점 척도)으로 1위를 차지함

- 다음으로 ‘청년기본소득 지급’ 3.91점, ‘농어민기본소득 확대’ 3.88점이었고 ‘전국민 기본소득제 도입’과 ‘최저임금 인상’은 3.73점으로 동일함. 이와 같은 결과는 향후 충남도 사회양극화 해소 정책에 참고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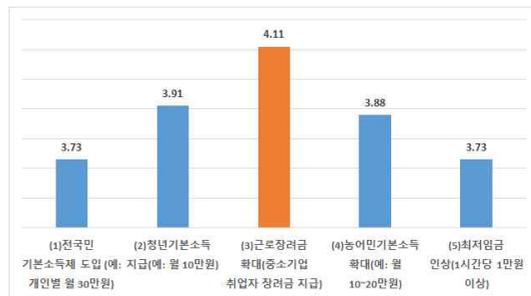


그림9 소득보장부문 정책선호도

(2) 사회보장정책 부문

○ 사회보장부문 6가지 정책 가운데 충남도민이 가장 선호하는 정책은 ‘연금간 격차 완화(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교원연금 등)’가 4.05점으로 1위를 차지함

- 다음으로 ‘아동수당 확대(예: 월 10만 원→30만 원)’ 3.93점, ‘전국민 상병수당 지급’ 3.87점이었고 ‘기초노령연금 대폭 인상(예: 월 30만 원→50만 원)’, ‘전국민 고용보험제 실시’ 3.77점 순으로 나타남
- ‘청년사회진출금 지급’(1억 원 정도 일시 지급)은 3.41점으로 다른 정책보다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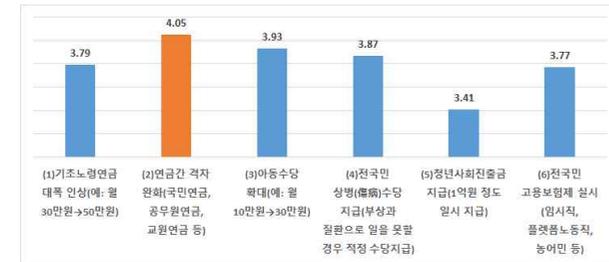


그림10 사회보장부문 정책선호도

(3) 부동산·주거 부문

○ 부동산·주거 부문 3가지 정책 가운데 충남도민이 가장 선호하는 정책은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4.02점으로 1위를 차지함

- 다음으로 ‘청년주택 확대’ 4.00점, ‘토지보유세 강화’ 3.99점 순으로 나타남
- 세 정책 모두 비교적 높은 선호도를 보여 향후 충남도 사회양극화 해소 정책에 반영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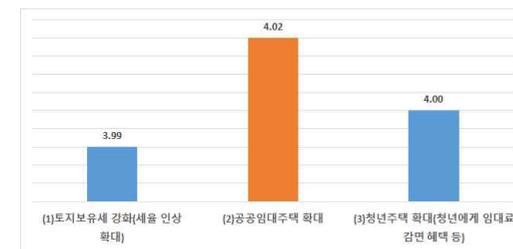


그림11 부동산·주거부문 정책 선호도

(4) 일자리·사회혁신 부문

- 일자리·사회혁신 부문 6가지 정책 가운데 충남도민이 가장 선호하는 정책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4.28점으로 1위를 차지함
- 다음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4.14점,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 강화’ 4.00점, ‘주4일 근무제 실시’ 3.86점, ‘주민공동체 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 3.00점, ‘경제적 희생 지원 확대’ 3.66점 순으로 나타남
-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일자리의 확대와 질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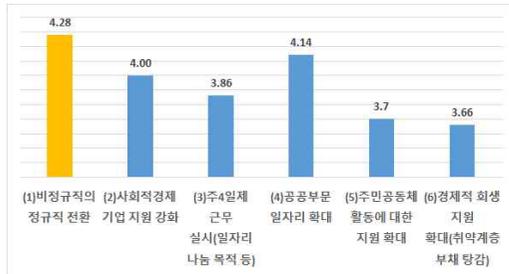


그림12 일자리/사회혁신부문 사회양극화 해소정책

(5) 교육·문화 부문

- 교육·문화 부문 6가지 정책 가운데 충남도민이 가장 선호하는 정책은 ‘방과후 학교 국가책임제’가 4.24점으로 1위를 차지함
- 다음으로 ‘취약계층 교육기회 확대’ 4.20점, ‘대학등록금 면제 또는 대폭 감면’ 4.19점, ‘농어촌학교 지원 확대’ 4.01점, ‘문화·여가 기회 제공 확대’ 3.99점으로 나타났으며 ‘문화예술인 소득 지원’은 3.52점으로 비교적 낮게 나타남
-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교육 부문의 정책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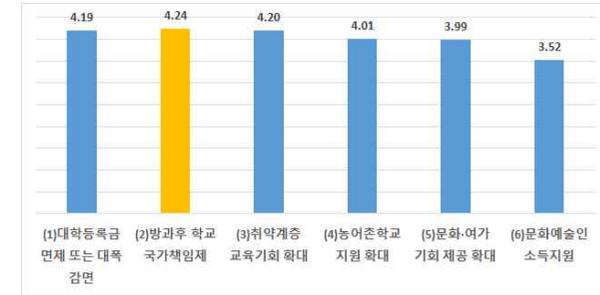


그림12 교육·문화부문 사회양극화 정책선호도

IV. 향후 정책 과제

-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많은 정책과제가 필요하나 본 연구에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책과제 가운데 특히 충남도에서 우선 추진해볼 수 있는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1. 기본소득제 도입

- 기본소득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소득 유무와 노동조건에 상관없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임
- 기본소득(basic income)은 불평등, 양극화, 일자리 감소, 환경파괴, 심리불안으로 극도로 피폐화되고 있는 이 시대에 인간의 존엄성 보장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는 데 가장 강력한 이념적 가치이자 정치적 도구임
- 기본소득의 5대원칙: 1) 보편성, 2) 개별성, 3) 무조건성, 4) 정기성, 5) 현금성
- 기본소득은 정치공동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한 국가, 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나 특정 계층과 지역을 우선 실시도 가능함(예) 아동, 청년, 노인, 장애인, 농민, 농촌주민, 예술인 등
- 현재 충남도는 초기단계의 아동, 농민 기본소득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청년, 농촌주민 등으로 확대하고 액수도 높일 필요가 있음
- 농(어)민수당은 2022년부터 농촌지역 모든 광역자치단체에서 실시될 예정이고 농

초기본소득도 2022년에 경기도에서 하나의 면지역에서 시범 실시될 예정임

- 기본소득의 재원은 토지세, 탄소세, 로봇세, 데이터세 등으로 다양
 - 기본소득의 핵심 관건은 안정적인 재원의 마련임
 - 최근 기본소득과 부동산 개혁을 결합해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통해 기본소득을 실시하는 방안이 강력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음. 부동산 가운데 토지는 공유자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금을 부과해 공평하게 나누는 방식, 즉 기본소득 방식으로 토지세를 부과하면 과세 저항이 적을 것으로 예상됨
 - 또한 탄소세의 경우에도 기후위기에 반드시 실시해야할 국경세이기 때문에 이를 기본소득 형태로 부과를 한다면 국민적 지지도와 효과가 높을 것으로 전망됨
 - 이외에도 로봇과 AI 등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로봇세가 필요하고 SNS 등 소셜 미디어의 데이터는 개인들이 창출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금부과를 통해 다수가 혜택을 받는 방식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음

2. 기본(기초)자산제 도입

- 기본(기초)자산제는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로 계층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생애주기별 일정한 자산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제도
 - 원칙: 1) 보편성(△), 2) 개별성, 3) 무조건성, 4) 정기성(△), 5) 현금성
- 기본소득으로는 실질적 자유를 실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정한 연령대가 되면 한꺼번에 일정한 자산을 보장하는 기본자산제가 필요함
- 기본자산제는 크게 신생아 기본자산제, 청년 기본자산제를 우선 실행할 수 있음
 - 신생아 기본자산제: 태어나면서 정부가 일정한 액수를 저축해주고 성년이 되었을 때 일시적으로 지급해 사회진출을 도움
 - 청년 기본자산제: 일정한 연령에 달한 청년에게 정부가 일정한 자산을 한번 또는 몇 차례 나눠 지급함

3. 이익공유제 도입

- 이익공유제는 코로나로 인해 이득을 보는 기업이 이익을 중소기업, 소상공인,

시민에게 공유하는 제도임

- 원칙: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에서 도입 추진하지만 항구적 공유체제도 가능함
- 대상 기업: 비교적 수익을 많이 내는 기업이 우선 대상임. 주로 반도체와 가전, 배달, IT 등 플랫폼-비대면 기업을 우선 대상으로 하되 특정하지는 않음
- 실시 사례: 정부는 WTO, FTA 등으로 피해를 보는 농어민을 위해 무역이익공유제를 통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마련해 지원하고 있음

○ 이익공유제에 대한 반대 논리도 존재함.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첫째,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이익을 특정하기 어려움
- 둘째, 주주의 재산권 침해 가능성
- 셋째, 현재도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성과공유제 실시

○ 충남도에는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들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이익공유제 실시 가능성이 큼

- 지역 내 이익공유제 실시를 위해서는 대기업-중소기업-충남도-시민단체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협약을 통해 실행이 필요함. 수익을 많이 내는 기업으로부터 일종의 사회연대기금을 조성해 취약계층을 돕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4. 주4일근무제 도입

- 주4일근무제는 4차산업혁명, 인공지능 등으로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 미리사회에서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음
- 특히 주4일근무제는 주4일 근무를 통해 일자리를 나누고 저출생도 극복할 수 있어 다양한 정책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

○ 주4일근무제는 긍정과 부정의 측면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음

- 긍정측면: 워라벨 가능, 일자리 나눔, 저출생 극복
- 부정측면: 기업의 생산성 감소, 정규직 혜택, 재정 부담

⇒ 주4일근무제는 긍정과 부정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타협을 통해 준비할

필요가 있음. 특히, 충청도에서는 공공기관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일본	자민당, 정규직에 한해 주 4일 근무 허용하는 정책 준비 중
스페인	희망업체에 한해 주 4일 근무 시 3년간 정부가 지원해 주는 방안 논의 중
뉴질랜드	저신다 아던 총리가 지난해 5월 주4일제 근무 제안
영국	노동당에서 2019년 총선에서 주4일근무제 공약
핀란드	산나 마린 총리가 주 4일, 하루 6시간 근무제 제안
한국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주4.5일근무제 공약

출처: 서울신문. 2023. 3. 23

참고 문헌

- 남기업. 2021. 부동산 불평등과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 방안. 충청도의회 「충남의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 제4차 토론회 발제문.
- 박경철. 2021. 불평등과 양극화에 관한 주요 쟁점과 과제. 충청도의회 「충남의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 제1차 발족 및 토론회 발표문.
- 박경철. 2021. 충청도 사회양극화 정책 평가 및 대응과제 연구. 충남연구원 전략과제.
- 토마 피케티. 2014. 21세기 자본. 장경덕 외 옮김. 글항아리